**한중 동맹론-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왕이웨이(王义桅) 인민대, 국제문제(事務)연구소 소장**

한국과 미국이 형성하고 있는 동맹관계는 그 강도(强度)면에서 미국과 동아시아 내 동맹국들과의 관계 중 가장 약한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중관계는 그 전략적 내포 범위를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여지가 있다.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은 지난 7월 초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연말까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한중 양국은 기존에 존재하였던 동북아 지역의 외교 형세를 타파하면서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려줄 수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독립자주외교정책과 비동맹정책을 고수해왔다. 그리고 현재 70~80개에 이르는 국가와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들 국가 중 중점을 두어야 할 국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중국은 선린우호협력조약을 통해서 주변국 외교를 총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중국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주변형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선린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쪽으로도 파키스탄과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 남쪽으로는 ASEAN과 중국-ASEAN 우호협력조약 체결을 논의 중에 있다. 그렇지만, 동쪽으로는 이와 같은 전략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 내에서는 한국과 《한중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는 정황적 증거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은 중국의 주변국외교 전략에 대한 포진(布陣)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동쪽으로 한국이 선린우호협력조약의 체결 대상국가로 논의되고 있는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한반도는 오랜 역사를 통틀어 중국의 안보 보호 대상이었다. 그 예로서 근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한국전쟁을 들 수 있다. 역사적 전통 요인에 의한 것이든, 지정학적 고려에 의한 것이든 위의 예는 한반도와 중국의 연계관계가 나날이 심화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중국과 북한에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나날이 그 합법성을 잃어가고 있다.

둘째, 중국과 북한 사이에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은 세 차례의 자동연장을 통해, 2021년까지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위의 우호조약은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선린우호협력조약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선린우호조약》 체결은 중국이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으로부터 받는 구속을 상쇄시켜 줄 것이다. 중국의 전략적 부담을 감면(减免)시켜주고, 이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도 고양시킬 수 있다.

셋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이 형성하고 있는 동맹관계의 견고함은, 미국과 동북아시아 내 미국 동맹국들 관계 중 가장 그 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안보영역에서 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순전히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동맹체제는 약화되고 있다. 일본이 정상국가화(재무장)를 하고 있고, 독일은 다시 부활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을 배신하였고, 이스라엘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장차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 그에 의지해서 살던 원숭이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자신의 안보를 과연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의 동맹체계를 약화시켜야 한다.

《한중선린우호협력조약》의 기본 내용은 당연히 핵무기 폐기, 안보확보, 한반도 통일의 삼위일체를 포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모델에 입각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면서,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핵 안보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중국이 가장 먼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한국 국민의 지지를 크게 획득하여,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적 질서로 복귀하는 안정적인 기초를 다질 수 있다.

《한중선린우호협력조약》의 체결은 중국 주변국 외교의 전략적 포석을 완성하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동북아의 지정학적 환경은 변화할 것이며, 이에 따른 연쇄적인 외교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할 것이다. 조약의 체결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잘 다룰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대한 핵 보호 조치를 통하여 한반도에서 영구히 핵문제를 해결하는 기초를 제공하여 중국의 주변 안보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의 동북아 동맹 체제를 동요하게 하고, 미국이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킬 정당성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이 중국에 가하고 있는 전략적 압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일본을 고립시키고 중국의 위상과 명망을 높여 안보 및 운명공동체를 내용으로 하는 중국의 외교전략구상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한다.

《한중선린우호협력조약》에 대한 논의는 매우 합당한 경제적, 정치적 기반을 지니고 있다. 한중 FTA의 신속한 체결은 한중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이미 한중 간 통화 스와프가 시작되었으며, 그 규모가 날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한중 간 장차 체결해야 할 종합적인 투자•무역 협정 및 미래 동북아 경제협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 《한중선린우호협력조약》의 체결은 한중 간 경제, 정치, 안보, 사회적 관계 발전을 포괄적으로 촉진할 것이며, 한중관계의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한국의 국내 상황도 《한중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라는 양대 전략 구상을 발표하였고, 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그리고 중국과 모두 장기간에 걸쳐 우호적인 국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한중관계를 가장 크게 저해할 요소는 양국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과 미국이라는 각각의 외부 요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한중관계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한중 관계가 북핵 및 한미동맹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면, 장차 획기적인 시대적 의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이 한중 관계를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새로운 강대국관계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직면해있는 모순적인 전략적 상황을 타파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고, 안보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형성하는 데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2013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그것은 미래 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질서는 어떻게 역내 국가 간 점증하고 있는 경제적 의존도를 관리하는 데 있으나, 아쉽게도 정치적, 안보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국가 관계가 퇴보하는 “아시아 패러독스”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전략이 가져온 비정상적인 상황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전형적인 중견 강국이고 중국은 새로운 강대국이다. 중국은 한국이 중견 강국 간 네트워크 형성을 확실히 지지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G20 내부에서 브릭스 국가들과 협력대화 기제를 형성하고, G7으로부터의 받는 전략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종합하자면, 한국과 중국은 특수한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G20과 ASEAN에서 전략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국제질서가 신흥국가와 중견국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중선린우호협력조약》의 체결은 한중관계의 적극적인 발전에 있어 거부할 수 없는 추세이며, 한반도에서 혼란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며, 중국의 주변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시키는 데에도 귀감이 될 것이다.